

이슈브리프

No. 2025-23

한미동맹의 전환 요구와 한국형 핵공유의 필요성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석(인천대학교 조교수)

2025-08-12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이 국제정치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면서 한국 국가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외교적 지평이 기존 동북아시아 중심에서 인태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인태 지역 질서의 향배가 한국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 이익중심의 전략을 추진하며 한국에게 명확한 노선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외교적 공간은 급격히 축소됐으며, 한국은 미중 사이의 '균형'외교를 추진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직면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내세워 한미동맹의 전환, 즉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와 한국의 기여 강화 등을 요구한다. 본 이슈브리프는 동맹체제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함께 인태 질서 구축을 추진해야 함을 전제로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전환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서 한국 정부의 핵심 과제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임무를 수용하되 주한미군 유지와 사령관 지위 강화로 미국의 방위공약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역시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능력 달성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전술핵 재배치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대북 억제를 재래식과 핵 차원으로 분리하여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미국의 핵우산은 북한의 핵 위협에 각각 특화된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미동맹 전략적 전환기에 한국의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고 안보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한국형 핵공유이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경쟁의 구조적 딜레마

인태 지역은 한국의 핵심 국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2022년 12월 한국 정부가 최초로 발간한 인태 전략서에 따르면, 인태 지역은 전체 무역에서 수출 78%, 수입 67%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여, 인태 지역 국가들과 중장기적 협력 확대가 경제발전과 번영에 직결되는 구조적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서 역대 한국정부들은 인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해왔다.¹ 현재 인태 지역은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무대다. 한국의 외교적 지평이 기존 동북아시아 중심에서 인태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역내질서의 유동성 증대 속에서 인태 질서의 향배가 한국의 국익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새로운 한미, 한중 관계를 맞이하면서 과거와 같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외교적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 이익중심의 전략을 세우면서 한국에게 명확한 노선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미중 사이의 균형외교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우선 미국은 자국 패권이 약화의 추세를 보이면서 역대 행정부들은 한국을 압박해왔다.²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훨씬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경제 압박 정책을 동맹국들에게 전개하고 있다.³ 또한 중국의 부상이 지속되면서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혼자 힘으로 중국과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⁴ 워싱턴에서는 인태 방어에 집단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중 견제를 위한 해외주둔 미군의 병력배치 최적화를 끊임없이 조율하고, 미국의 동맹 및 협력국가들의 군사 역량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동맹 현대화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와서 한미 관계의 핵심 의제로 부상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억제 및 거부전략이 인태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된 가운데 미국은 기존의 동맹 운용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억제에 집중하는 가운데 동맹 및 협력국은 각 지역의 재래식 억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전략 패러다임하에서 동맹의 가치는 상호 안전보장의 제공보다는 미국의 전략적 우위 유지에 대한 기여도로 평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국방정책 설계자로 평가되는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의 자주적 방어능력 강화와 주한미군의 대중국 억제 임무 전환"을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한중관계의 구조적 변화도 주요 요인이다.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가 본격화되면서 한중 경제관계는 상호보완에서 경쟁적 관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했다.⁵ 현재 중국은 한국의 핵심 경쟁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였다.⁶ 더욱 주목할 점은 8대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우위가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반도체, 조선, 철강 등 7개 부문에서 중국에 수출 점유율을 추월당했거나, 선두인 중국과의 격차가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벌어졌다.⁷ 중국은 단순한 추격을 넘어 신산업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⁸ 요컨대 중국은 한국경제의 동반자에서 전방위적 경쟁자로 완전히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은 경제번영과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한국의 핵심적 국익에 직접적이고 다층적인 위협으로 자리잡았다. 가장 심각한 영향은 해상교통로 안보 측면에서 나타난다. 한국 에너지 수입의 80~90%가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를 경유하여 운송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기지 건설과 군사적 영향력 확대는 현실적 위협으로 부상했다. 이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항행의 자유 원칙을 훼손하며, 한국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취약성으로 자리한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불법적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군사적 긴장까지 고조되고 있다.⁹ 이는 남중국해에서와 유사하게 중국이 서해에서도 영유권 분쟁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한국의 안보 위협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대만 유사시 한국은 직접적 연루를 회피하고자 하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은 간접적으로 한국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주한미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연동될 경우, 한국의 안보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

미국과 중국 모두 철저히 자국 중심적 관점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인태 지역에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와 함께 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인태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차지할 수 있는 영향력과 지분을 어떠한 국가와 함께 했을 때 극대화시킬 수 있는냐의 관점을 핵심 고려사항으로 상정한다면 한국은 미국과 함께 인태 질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주목할 점은 미국이 전 세계 동맹 시스템을 자국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과 수시로 이견을 조정하고, 공통의 이익을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과 외교적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이러한 미국의 동맹 관리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제안한 인태 구상¹⁰을 현재 자국의 인태 전략의 토대로 수용한 것이다. 일본은 2017년 미일정상 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을 양국 공동의 외교 전략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미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통해 현재의 인태 전략으로 구체화했다. 일본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 한국도 미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협의를 통해 양국의 공통이익을 반영한 전략 방향을 제안한다면, 인태 질서 재편 과정에서 국익과 비전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이 중국과 함께 국익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인태 질서를 재편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정체성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한국에게 요구해온 외교정책의 핵심은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서 중립적 위치를 취하라는 것이다.¹¹ 공통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건설적 외교안보 전략 설정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여기고 실질적으로 협력할 의지를 보여왔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현실은 매우 비관적이다. 중국의 대한국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중립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한국을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 이익을 확대하려는 적극적 협력 의지는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한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인태 질서 구축을 위해서 전략적 동반자로 선택해야 할 국가는 중국이 아닌 미국일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을 그 자체로서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 국제질서와 새로운 인태 질서를 교란해 평화와 번영을 저해할 경우에만 국익에 따라 미국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새로운 한미동맹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한미동맹은 북한만을 상정한 기본 구성을 넘어, 특정 국가를 겨냥하기보다 인태 지역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위협 세력에 대응하는 지역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응한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미국과 함께 인태 질서 재편에 한국이 동참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 미국의 동맹 현대화 논의로 향후 한미동맹을 진화시키면서 한미 양국의 공통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한미동맹은 대북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북핵 위협의 진화에 따라 꾸준히 발전해왔고, 핵심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점진적 발전에 있다. 한미의 확장억제 태세는 북핵 위협의 단계적 고도화에 대응하여 선언적 차원에서 실질적 운용체계로 진화해왔다. 확장억제는 1978년 제11차 한미안보 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최초로 명시된 것에서 제도적 기원을 찾을 수 있다.¹² 한편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1·2차 핵실험으로 확장억제 공약이 재확인되긴 했으나, 여전히 정치적 선언의 성격이 강했다.¹³ 확장억제의 실질적 제도화는 2010년 한미확장억제 정책위원회(EDPC) 설립을 통해 시작되었다.¹⁴ 제도적 발전은 2015년 억제전략위원회(DSC)와 차관급 확장억제 전략협의그룹(EDSCG) 출범으로 집약되었다.

2017년 말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확보하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 핵 위협 투사 능력을 구현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 이행 의지를 둘러싼 의구심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북핵 능력이 질과 양의 모든 측면에서 전례 없이 고도화되면서 "미국이 LA나 샌프란시스코를 희생하고 서울을 지킬 것인가"라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 이후로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탄두 수량을 증강해왔으며¹⁵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근단거리 탄도미사일(KN-23, KN-24)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완벽한 방어가 어렵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¹⁶ 이런 와중에 북한은 2022년 9월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면서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했고¹⁷ 상시적 핵사용을 위협하며 핵그림자 위협을 고도화했다.

이렇듯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의심받게 되자, 북핵억제를 위한 대안적 방안들이 광범위하게 제시되고 있다. 주요 정책옵션으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NATO식 핵공유 체제 도입, 전술핵 재배치 등이 제기되었다.¹⁸ 이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대응으로서 양국은 한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2023년 4월 한미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아울러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신설하여 양자 간 확장억제 협의 메커니즘을 제도적으로 체계화하였다.¹⁹ 총

4차례의 NCG 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의 세부 분야를 단계적으로 조율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체제를 발전시켜왔다.²⁰ 특히 주목할 점은 2024년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는 사실이다. 한미가 NCG를 설립한 지 불과 1년 만에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북핵 위협의 고도화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체제 강화 필요성과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는 NATO의 사례와 비교해도 상당히 빠른 진전으로 평가된다.²¹

주목해야 할 점은 대중 견제를 위한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가 한미 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작전 반경을 철저히 한반도 내로 제한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를 회피할 수 없는 전략적 전환점에 도달하였다. 주한미군 지휘부의 공개적 입장 표명은 이러한 정책 전환의 가시적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임무 범위를 대북 억제력을 넘어 대중국 견제 및 대만해협 안정화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공식 언급한 것은 전략적 재편의 구체적 신호로 평가된다.²²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중국의 인태 지역 내 현상변경 시도를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역내 군사작전 수행에 주한미군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정책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방위라는 전통적 임무와 더불어 대중 전략경쟁이라는 광역적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런 전략환경 변화는 NCG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태 전략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NCG의 협의 범위가 대북 억제를 넘어 대중 억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²³ 이는 한국 안보정책에 새로운 전략적 과제를 제기하며, 한미동맹의 지리적·기능적 범위가 한반도 중심에서 인태 지역 전체로 확장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한미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 역할의 전략적 재편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 기존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재평가함으로써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이익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접점을 최대한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중국의 해양전력을 제약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다. 특히 이어도 지역은 중국이 동·남중국해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략적 조임목(choke point)이다. 주한미군 전력을 적절히 배치한다면 서해에 집중된 중국 해군력을 봉쇄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현재 집중하는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도 효과적인 대응책이 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해 한반도를 이런 임무에 활용하도록 한다면, 주한미군은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증강되어야 한다. 제2의 애치슨 라인이 선언되지 않도록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방향성을 일치시킬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T. Brunson)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을 "불침(不沈) 항공모함(fixed aircraft carrier)"으로 비유한 것도 대중 견제라는 전략적 맥락에서 한국이 지니는 지정학적 가치와 전략적 중요성을 함축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²⁴ 이는 인태 지역의 미중 간 군사적 대립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군사전략 구현에 있어 핵심적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28,500명의 주한미군 중 핵심인 제8군(20,000명)과 제7공군(8,000명) 가운데 대중 견제 임무 전환 시 핵심전력은 제7공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주한미군의 임무전환이 공식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제7공군 예하 제51과 제8전투비행단의 전반적인 재배치와 조정이 실행 중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²⁵ 제7공군의 대대적 재배치와 조정은 대중 견제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올 하반기에 전개가 예상되는 F-35 스텔스 전투기는 작전반경을 고려하면 대만 유사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²⁶ 이러한 한국의 지리적·전략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공군전력을 유지·확대하여 중국을 견제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최근 미군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2024년 현역 미공군 소령이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한 보고서가 미 전략사령부의 2024년 억제 논문상을 수상한 것은 미국의 핵전략 담당 군 수뇌부들이 전술핵 재배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²⁷ 대북 억제를 위해 미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향후 대중 견제 강화를 위한 세부적 방안으로 논의를 확장시켰다.²⁸ 주목할 점은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전통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사실이다. 북핵 억제만을 위해서는 제한된 전술핵 자산을 한국에 재배치할 필요가 없음이 핵심 논리였다. 그러나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이 대중 견제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미국 내에서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계철선 역할을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해야 한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의 대북 핵억제력 보장과 밀접하게 연동되므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주한미군의 공군전력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대가로, 한국은 일정 규모의 지상군 중심 주한미군 주둔을 보장받아야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핵심임무를 대중 견제로 재설정하면서 주한미군의 주축인 육군 제8군의 대대적 감축 및 철군이 검토되고 있다.²⁹ 하지만 지상군 중심의 주한미군이 전면 철수할 경우 발생하는 대북 억제력 약화는 한국이 감당하기에는 과도한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적정 규모 유지 방안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제2보병사단이 철수하더라도 일정 규모의 지상군 전력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주둔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며, 동시에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을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미군 부대가 한국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절대적 규모 유지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주한미군이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과 전시 증원을 보장하는 병력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중 견제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인해 미군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직관적으로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수가 많을수록 이들이 인계철선 병력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는 미군 내에서 차지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위상이다. 미국이 단일전구(單一戰區, One Theater) 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구상이 현실화되면 주한미군사령관과 주일미군사령관의 지휘관계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다.³⁰ 현재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병력 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앞으로 주한미군의 병력 수가 더욱 감소하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단일전구 구상에 따른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지휘체계 재편 과정에서 미국의 한국 전술핵

재배치는 상당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 미국이 대중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술핵을 한국과 일본에 재배치하고자 하더라도, 일본의 강력한 반핵 정서와 비핵 3원칙으로 인해 실현이 용이하지 않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미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므로, 국민 정서상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일본만큼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게 되면, 미국의 전술핵 관리와 운용은 주한미군사령관의 핵심 소관 업무가 될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의 전략적 지위를 주일미군사령관보다 중요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제한적 핵무기 사용권한을 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³¹ 이는 NATO의 핵공유체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이 단순한 방어용 억제 수단을 넘어서 공격적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 지휘관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일정한 핵무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작전상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주한미군이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북 억제전략의 이원화: 한국의 재래식 억제와 미국의 핵 보장

대중 견제로의 주한미군 역할 변경은 대북 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주한미군 역할 변경이 한국이 수용해야 하는 불가역적 현실이라면, 그 안에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발 안보 위협의 대응 방식을 재래식 차원과 핵 차원으로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되는 경우 한국의 재래식 전력만으로 북한의 재래식 도발을 억제 및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으며, 향후 한국의 재래식 첨단 무기 개발 및 전력화를 고려하면 충분한 국방예산 투입의 전제하에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한국의 재래식 전력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주한미군사령관조차 동의했듯이 그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능력 달성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³²

문제는 북한의 핵 위협이다.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능력은 비약적으로 고도화됐다. 북한의 핵전력을 핵탄두 수, 투발 수단, 지휘통제 시스템으로 세분화했을 때, 미국의 핵우산 없이는 한국의 독자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더 큰 우려는 북핵 능력이

앞으로도 더욱 고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핵심 요소는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핵우산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핵 억제력 확보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한미군 재조정 논의 이전부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꾸준히 거론되어왔다. 이 논리는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전략적 모호성이란 핵 사용 조건을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하여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겠다는 것이지만, 북한의 내부 급변사태 등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이러한 불명확성이 오히려 북한의 기회주의적 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억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³³ 또한 보장 측면에서도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 속에서 한국 사회를 온전히 안심시키지 못했다. 핵무기의 가시성이 결여된 전략은 결국 미국의 핵우산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게 전략적 명확성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그 구체적 방안 중 하나가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이다. 북핵 억제만을 위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를 점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³⁴ 한국이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주한미군의 유지 및 확대, 주한미군사령관 지위 강화뿐만 아니라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핵억제 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한미가 한국에 재배치할 전술핵무기의 수 및 미국 핵전력의 한미 간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에 세부적으로 합의한다면 북핵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의 기본 논리는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적 명확성에서 출발한다. 첫째,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에 대한 실시간 핵 보복 능력을 보장한다.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한국은 수분 내에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되며, 이로 인해 극도의 시간적 압박에 놓인다. 그러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즉각적인 핵 보복을 위한 대응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둘째 한국 영토 내 핵무기의 물리적 존재는 더욱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억제 효과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북핵으로 인한 비대칭성을 상쇄할 수 있다. 셋째, 핵보장 측면에서도 전술핵 재배치는 핵 존재의 가시성을 높여, 한국인의 미국 확장억제 신뢰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은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위해 필요한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미국이 이미 해체를 결정한 전술핵무기를 한국의 재정으로 현대화하여 도입하는 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내 미국 전술핵무기 저장시설³⁵을 현대화하거나 새로 건설하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비용적 부담을 한국이 담당한다면 미국의 반대 유인이 감소할 것이다. 군산 기지에 100개의 B61-12 중력폭탄을 배치하고 위해서 소요되는 초기비용은 약 3.6~5.2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6년 방위분담금의 51~61%이며, 2025년 한국 국방예산의 1~2% 규모이다.³⁶

둘째, 재배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 중 일부는 한국의 최첨단 재래식 전력과 통합하여 한국형 핵공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핵공유는 핵보유국이 비핵보유 동맹국과 핵 전력의 일부 운용을 공유하는 핵 전략 개념으로, 핵공유의 본질적 특성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의 공유가 아니라 핵탄두 투발 수단의 공유에 있다는 점이다. 핵공유 체제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핵보유국인 미국이 단독으로 보유하며 비핵보유 동맹국은 운반체계의 운용만을 담당하게 된다. 한미는 NCG를 통해서 미국의 핵전력에 대한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에 합의하였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사항은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의 통합 또는 핵공유 방안이다.

한미의 핵공유 방안으로는 우선 NATO식 핵공유를 들 수 있다.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경우,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군산공군기지가 거론된다. 이에 따라 우리 공군은 추가로 도입하는 F-35A 20대를 군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³⁷ 따라서 한미 합의해 한국 공군의 F-35A를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이중용도 전투기(Dual Capable Aircraft, DCA)로 운용한다면, 한국은 NATO식 핵공유 방식으로 대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가칭 '미사일 핵공유'로, 한국의 탄도미사일 전력에 미국의 전술핵탄두를 탑재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공군기지가 북한의 선제타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NATO식 핵공유에 반대해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의 전술핵탄두를 한국의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이동식 발사차량과 터널시설 등을 활용해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운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³⁸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에서 운용하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은 이미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장착하면 대북 억제태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이 방안은 한중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시 대중 견제에도 활용될 수 있다. 현무-4와 현무-5 탄도미사일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사정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³⁹ 만약 한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미국의 전술핵탄두를 탑재하면 한미는 필요 시 더욱 강력한 대중 견제 전략의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⁴⁰

이처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기반한 한국형 핵공유는 대북 억제력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한미가 대북 핵도발을 억제할 견고한 확장억제 태세를 마련한다면, 한국은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의 재래식 위협 억제에 집중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지 말고, 첨단 재래전력을 내실 있게 강화해 재래식 억제를 주도해야 한다. 그리고 재래식 억제를 한국이 책임지는 만큼 미국으로부터 기존 NCG 체제를 넘어서는 핵보장을 확보하고, 특히 한국이 직접 참여하는 한국형 핵공유 방안을 통해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핵옵션을 제공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

¹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제시하며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적 연속성 위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국 최초의 공식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며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이전보다 강화된 아세안 정책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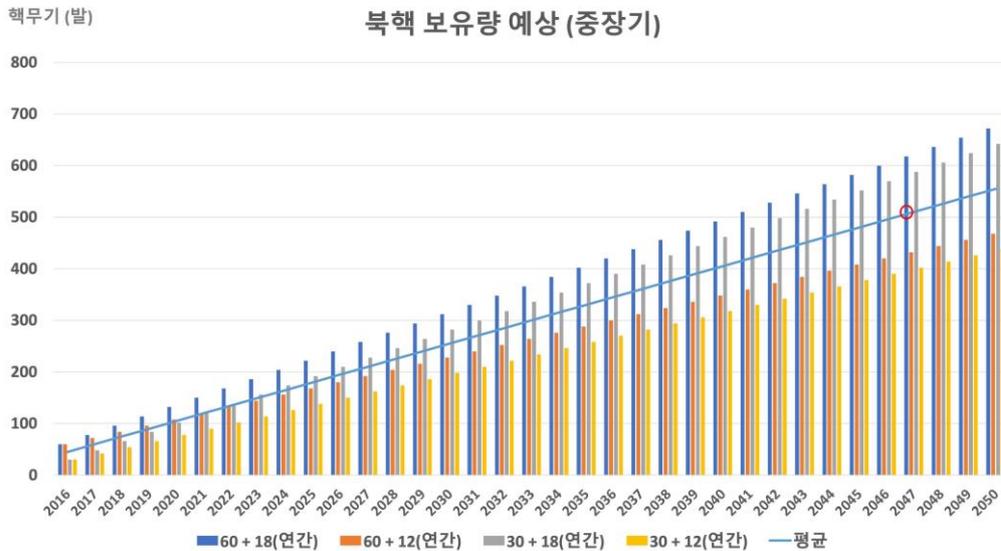
² 미국의 상대적 패권 하락은 21세기 초 중동의 두 차례 대규모 군사개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나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시켰다. 특히 미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 심화는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의 심각한 약화로 이어졌으며, 미국 중서부 제조업 지역의 몰락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변화의 동력이 되었다. 2016년 트럼프의 당선은 바로 이러한 제조업 쇠퇴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반발이 폭발한 결과였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는 미국의 우선주의 및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안보비용 부담을 요구했으며, 이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표면적으로는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더욱 교묘한 방식의 동맹국 압박을 시작하였다.

³ 관세정책을 통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재정적자 축소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 가운데, 관세정책은 국방비 증액, 투자 확대와 대중 견제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동맹 길들이기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 위협을 통해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상호호혜적 동맹관계에서 상대적 종속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⁴ 워싱턴 내 사고 전환의 배경에는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 현대화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우려가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강력한 접근 거부/지역 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 능력 증강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력 투사 능력에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이 주로 인도태평양 상황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배치하는 반면, 미국은 다지역 대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중

- 세력균형을 점차 중국 쪽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군사 전략에 대한 근본적 재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접근법은 워싱턴의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훨씬 더 큰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 ⁵ 과거 한중 경제관계는 전형적인 보완적 분업구조를 특징으로 하였다. 한국은 고부가가치 중간재와 자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중국은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조립가공 생산기지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상호보완성에 기반하여 중국은 21세기 초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한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 ⁶ 유엔 국제제조업 경쟁력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0년 한국 12위, 중국 23위로 11계단의 격차를 보였으나, 2010년에는 한국 4위, 중국 7위로 그 격차가 3계단으로 급격히 축소되었다; “‘한-중’ 제조업 격차, 10년새 11계단서 3계단으로,” 『한겨레』 (2024.7.13.)
- ⁷ 특히 국가 3대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2013년 중국의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이 한국의 2배 수준이었으나, 10년 후인 현재 이 격차는 최소 3배에서 최대 8배까지 확대되었다; “8대 핵심산업, 7개는 중국에 밀렸다... '中 블랙홀'에 빠진 성장엔진,” 『조선일보』 (2024.12.2.)
- ⁸ 중국은 지난 20년간 인류가 새롭게 창출한 수익성 높은 신산업 영역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점점 더 많은 분야 퍼스트 무버 될 것...한국 제조업 위기,” 『한겨레』 (2025.5.28.)
- ⁹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 시도를 중국이 저지하면서 양국 해경이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서해에 수상한 中구조물...한국 조사선 막아 한중 해경 대치,” 『연합뉴스』 (2025.3.18.)
- ¹⁰ 아베의 인도태평양 개념의 초기 구상은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치관 외교에 기반하여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연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 ¹¹ 다시 말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미국의 정책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라는 소극적 요구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한국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차원의 건설적 협력을 중국이 제안하거나 수용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¹²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7년 취임 직후부터 인권문제를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한국은 미군 철수로 인한 한국의 안보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독자적 핵개발을 검토하는 등 양국은 갈등하였으나, 1978년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새롭게 창설될 한미연합사령부를 통제하기 위한 한미군사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미국의 핵우산이 처음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
- ¹³ 제38차 및 제41차 SCM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방위공약이 재천명되었으나,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핵전력의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
- ¹⁴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확장억제의 포괄적 제도화 시기로 평가되며, 한미통합국방대화(KIDD), 맞춤형 억제전략(TDS),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 등 주요 협의체들이 단계적으로 구축되었다.
- ¹⁵ 북한이 그간 축적해온 핵물질 기준으로 2025년 기준 127~150발 2030년에는 201~243발로 보는 견해나 2025년 200여 발과 2030년 310여 발로 보는 견해가 존재하며, 이는 상당히 우려해야 할 수준이다. 2025년 기준 북한은 우라늄탄 115~131발, 플루토늄탄 15~19발, 도합 127~15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고 추정되며, 2030년 기준 우라늄탄 180~216발, 플루토늄탄 21~27발로 총합 201~243발 정도 보유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상규, “최근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 변화 분석과 비핵화 고려사항,”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 FOCUS』 제41호 (2025.7.17). 또한 아산정책연구원과 RAND 연구소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핵물질 누적량을 12~18발로 추정하는 경우, 2027년 200발 분량을 넘기기 시작하여 2032년에 300발, 2040년에는 400발, 2047년에 500발을 넘게 되며, 이를 시각화한 도표는 아래와 같다; 최강·브루스 W. 베넷 등,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아산정책연구원 및 RAND 연구소, 2021)



- 16 권용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9주년 기념학술회의』 (2025.4.10.), <https://ipus.snu.ac.kr/blog/archives/news/10483>
- 17 황일도, “북한 핵무력정책법 분석: 핵전력 용도 및 지휘통제 조항을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IFANS FOCUS』 2022-18K (2022.9.14.)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jsessionid=2vbYliWhblA8Wp9rt85gVCqT.public21>
- 18 특히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은 확장억제 신뢰성 저하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중요한 계기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술핵 배치나 자체핵 보유도 검토할 수 있고 우리 기술로도 가능하지만, 현실적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핵우산을 전제한 발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핵무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례가 되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자체 핵 보유’ 언급...”, 『Voice of America』 (2023.1.12.); Uk Yang, “Is South Korea Going Nuclear?”, *38 North* (Feb 3, 2023)
- 19 핵후견국(nuclear patron)이 핵피후견국(nuclear protégé)에 대한 확장억제 신뢰성을 제고하는 세부 영역들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보공유이다. 핵후견국이 핵피후견국과 자국의 핵전력 배치·운용·작전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둘째, 협의체계이다. 핵후견국이 자국의 핵작전 시행 의사결정 단계에 핵피후견국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공동기획이다. 핵후견국의 핵작전 기획을 핵피후견국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실행이다. 공동기획 단계에서 마련된 작전계획을 핵후견국과 핵피후견국이 공동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 20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언론성명,” (2025.6.10.), <https://kr.usembassy.gov/ko/061124-joint-press-statement-on-the-3rd-nuclear-consultative-group-ncg-meeting-ko/>

- 21 NATO의 경우 1966년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NPG)을 설립한 후 1975년에 와서야 핵작전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간 확장억제 제도화의 속도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2 “동맹의 역할, 대중 견제로 넓히려는 美,” 『조선일보』 (2025.5.19.)
- 23 “한미 핵우산 협의 지연... “美, NCG 中견제로 확장 계획”, 『동아일보』 (2025.7.29.)
- 24 “주한미군사령관 “한국, 일-중 사이 떠 있는 항공모함”...중국 견제 부각,” 『한겨레』 (2025.5.16.)
- 25 주한미군 제7공군은 현재 대대적인 재편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군산 공군기지에 있는 제8전투비행단 예하 35비행대대 소속 F-16은 모두 오산 공군기지의 제51전투비행단 예하 36비행대대로 재배치되면서, F-16전투기 31대가 운용 중인 슈퍼비행대대가 탄생했다. 2025년 10월까지 슈퍼비행대대 1개를 더 추가하여 총 F-16 62대를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제51전투비행단 예하 제25비행대대에서 운용해왔던 A-10 공격기는 2025년 9월에 퇴역 예정인 가운데, A-10의 공백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기존 F-16의 항전체계를 업그레이드하여 메울 예정이다. 심지어는 미군은 군산 제8전투비행단 예하 제80비행대대에 F-35A 1개 대대(20대)와 추가 대대의 순환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주한미군 A-10 공격기 24대 퇴역,” 『연합뉴스』 (2024.11.13.); “미군, 군산에 F-35A 상시배치 검토,” 『연합뉴스』 (2025.4.27.)
- 26 F-35의 작전 반경은 약 1,100km로, 대만 유사시 임무 수행 후 제1도련선 밖에서 급유 후 한국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전술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Benjamin Sando, “How Can US Forces Korea help deter both North Korea and China?,” *Global Taiwan Brief* 10(13) (July 2, 2025), <https://globaltaiwan.org/2025/07/how-can-us-forces-korea-help-deter-both-north-korea-and-china/>
- 27 David Phillips, “Nuclear Redeployment: A Roadmap for Returning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to the Korean Peninsula,” *School of Advanced Nuclear Deterrence Studies* (August 2024),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82950169_Nuclear_Redeployment_A_Roadmap_for_Returning_Nonstrategic_Nuclear_Weapons_to_the_Korean_Peninsula
- 28 “트럼프, 한국에 전술핵 배치해 中 견제할 수도,” 『조선일보』 (2025.1.9.)
- 29 현재 주한미군 28,500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육군 제8군이다. 이들 지상군은 지금까지 대북 억제력을 핵심 임무로 하여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주한미군의 핵심 임무를 대중국 견제로 재설정할 이상, 지상군 중심의 제8군이 한국에 지속 주둔할 전략적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미국 내에서 12,000명에 이르는 제8군 예하 제2보병사단 철군 논의가 제기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 30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미국이 일본이 제안한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시작전구역으로 통합하려는 이 구상의 전략적 배경에는 중국 견제라는 목표를 역내 주요국들 간 협력을 통해 달성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의 안보 부담 공유 체제를 제도화하여 대중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단일전구 체제가 도입될 경우,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와 전략적 임무에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북한 억제와 한국 방어에 집중해왔던 주한미군이 향후 중국을 겨냥한 광역억제 전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임무 확장은 대만 해협이나 동·남중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 상황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한국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전면예 노출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전구 통합의 실현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군사 지휘체계의 재구성이다. 효과적인 통합 작전을 위해서는 단일화된 지휘구조가 필수적인데, 이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간 계급 체계의 조정을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대중 견제를 위한 전진 기지로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주일미군사령관을 현재의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동시에 트럼프 2기 정부의 해외 군사조직 효율화 정책과 연계하여, 새로운 대장 보직 신설을 위한 자원 확보 차원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의 계급을 대장에서 중장으로 조정하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휘구조 변화는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미군 역사상 외국인 지휘 하에서의 복무라는 선례를 회피하기 위해 전시작전권 이양 후 예상되는 미래 연합사 체계에서는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중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부사령관을 겸직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주일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보다 높은 계급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한미동맹의 근본적 거버넌스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 ³¹ "양욱, "주한미군 유연성 인정하고 美 사령관 핵 사용권얻어야 최선", 『뉴데일리』 (2025.6.29.)
- ³² 심지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2025년 8월 7일 하계 한미연합연습을 앞둔 언론브리핑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의 조건을 중간에 바꿔서는 안되며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전환해야 한다며 전작권 조기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Gen Xavier Brunson Holds Press Briefing," *U.S. Forces Korea Press Release* (Aug 10, 2025), <https://www.usfk.mil/Media/Press-Products/Speeches-Transcripts/Article/4270708/gen-xavier-brunson-holds-press-briefing/>; "연합사령관 "전작권 조기 전환, 안보 위협...숫자 보단 능력", 『SBS뉴스』 (2025.8.10.)
- ³³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명확한 핵 사용 조건을 명시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겠다는 접근방식이다. Sangkyu Lee, Suon Choi, Adam Mount, and Toby Dalton, "Nuclear for Nuclear? Understanding Divergent South Korean and American Perceptions on Deterring North Kore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June 27, 2024);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한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먼저 대북 억제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평시에는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북한 내부 급변사태로 인한 급격한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에서는 대북 억제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된다; 최강·브루스 W. 베넷 등,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아산정책연구원 및 RAND 연구소, 2023)
- ³⁴ 미국이 북핵 억제력 강화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첫째로 미국의 제한된 전술핵이 북핵 억제로만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의 선제타격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마지막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적 측면이다. 2024년 기준 미국은 1,770개의 핵탄두를 실전배치하고 있는데 그중 1,670개는 전략핵탄두이고 100개가 전술핵탄두이다. 1,670개의 전략핵탄두 중 1,370개는 탄도미사일에 배치되었고, 300개는 전략폭격기에 배치되었다. 100기의 전술핵무기는 5개의 NATO 회원국들(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이탈리아)에 보관되고 있다. 실전배치된 1,770개의 핵탄두 이외에 예비전력으로 1,938개의 핵탄두가 있으며, 1,336개의 핵탄두는 퇴역했거나 폐기될 예정이다; Hans M. Kristensen, Matt Korda, Eliana Johns, and Mackenzie Knight, "United States nuclear weapons 2024,"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80:3 (2024), pp.182-208.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예비전력으로 가지고 있는 100개의 전술핵무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미국이 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p.90.
- ³⁵ 냉전시절 한국에 전개되었던 미국의 핵무기가 저장되어 있던 시설들을 현대화하거나 새롭게 건설하는 방안이다. 미국은 1958년 펜토믹 사단 배치와 함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여 대북 병력열세를 보완했으며, 1967년에는 최대 950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전술핵무기를 급격히 줄이기

-
- 시작하여 1991년 전술핵 철수 당시 약 100여 발이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양욱, “한반도에 배치되었던 전술핵폭탄,” 『국방과 기술』 no.458 (2017.4.), pp.30~31.
- ³⁶ 조비연, “미국의 전술핵 ‘유연 재배치(Flexible Redeployment)’ 비용 및 편익평가,” 『세종정책브리프』 2025-09 (2025.4.17), p.2
- ³⁷ “주한미군, 킬체인 ‘스텔스 F-35A’ 20대 첫 한반도 배치 추진,” 『중앙일보』 (2024.11.29.)
- ³⁸ 양욱, “[세계와 우리] 한미동맹, 한국에 집중하게 하자,” 『세계일보』 (2025.4.25.).
- ³⁹ 2021년 미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여 한국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 제한을 철폐했으며, 이에 따라 개발된 한국의 현무-4와 현무-5 탄도미사일은 탄두중량을 줄일 경우 실질적으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⁴⁰ 핵탄두가 탑재한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한국 배치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운반수단과 플랫폼을 한국이 제공하여 미사일 발사여부를 미국 독단이 아닌 한국이 관여할 수 있어야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레버리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